주요국 예산안 - 스웨덴

2023.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연구책임자

오종현 센터장

배진수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정은 선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 5

가. 경제전망 ····· 4

나. 재정전망 ····· 5

2. 예산기조 ····· 8

3. 예산안 주요내용 ····· 9

가. 세입 ····· 10

나. 세출 ····· 12

4. 주요 재정정책 ····· 15

스웨덴

□ FY2023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출처

○ From the Budget Bill for 2023: Budget statement, 2022.11.8

○ Budgetpropositionen för 2023, hela dokumentet, prop.2022/23:1, 2022.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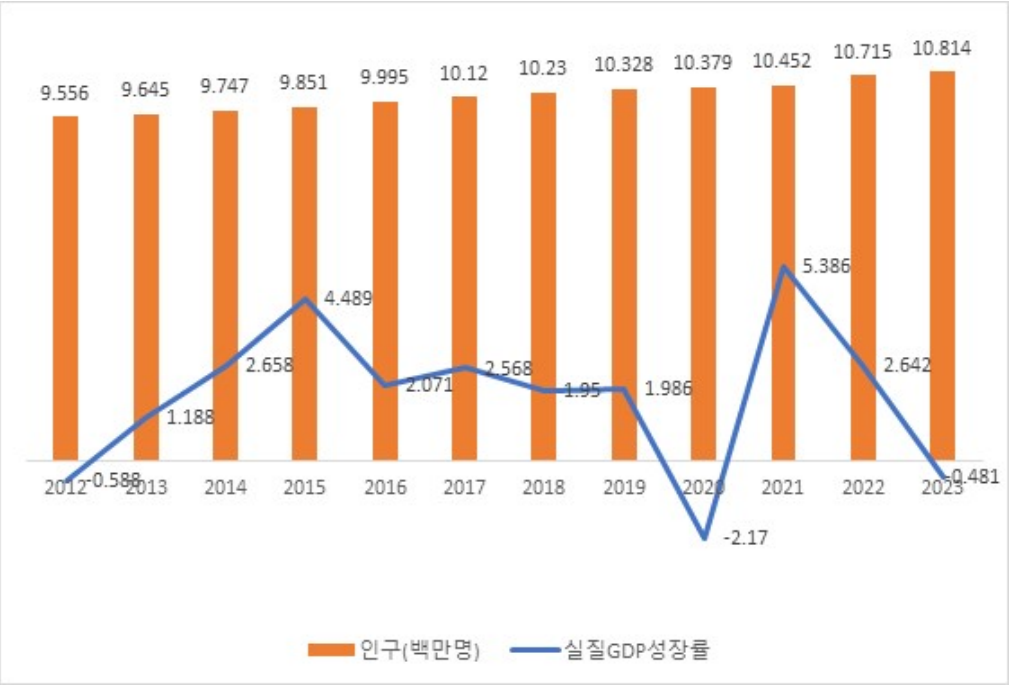
□ 환율: 1크로나 = 127.88원(2022년도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 2023년 추정치 경상 GDP 653억 9,621만 달러(IMF)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 2021년 기준 86.6%(World Bank)

□ 인구 : 2023년 추정치 약 10.814백만명(추정치, 2023년 기준, IMF)

□ 실질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및 전망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3, 검색일자: 2023.4.25.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성장) 스웨덴은 2023년 경기 침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물가상승률과 금리 상승이 가계와 기업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전망) 팬데믹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의 단계적인 폐지로 인해 2022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55.6%로 감소할 전망이며, 2023년 지출한도 수준은 GDP의 25.8%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

□ 예산기조

○ 경제 상황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스웨덴 정부는 예산에 약간의 긴축 편향을 제안

- 어려운 시기에 스웨덴을 강화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지원, 복지 강화, 안보 및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을 포함

-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력 생산을 늘리고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

□ 주요 재정정책

○ (정책목표) 재정정책 목표는 흑자 달성에 집중하고, 긴축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 감소 및 가계와 기업 지원을 늘리는 재정정책 추진

○ (에너지대책) 특히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운송 비용과 관련한 세금 및 기타 규제를 개혁할 계획

○ (주요투자정책) 전력 부족 및 에너지 위기 대응, 고용 안정 지원, 국방 및 치안 강화, 교육 인프라 개선 등에 우선 투자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스웨덴 경제는 2022년 상반기에는 비교적 강세를 보였지만, 2023년에는 -0.4%로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2분기는 팬데믹 제한 조치 해제에 따른 가계 소비 증가와 투자 실적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임

○ 2023년에는 높은 물가상승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 소비 위축, 투자 감소 등이 맞물려 역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주로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금리 상승 및 전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률이 가계와 기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한 물가상승률(CPIF)[1]은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2023년에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팬데믹 기간 동안 장기 실업률이 증가했으며, 경제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팬데믹 이후 느리게 회복하여 타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실업자 중 약 절반이 1년 이상 실직 상태이며, 2년 이상 실직 상태인 사람의 수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함
- 경기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

□ 가계 소비 위축과 유럽 에너지 위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외부 수요 감소가 스웨덴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

1) 스웨덴은 CPI 대신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CPIF(Consumer Price Index with a Fixed Interest Rate) 지표를 인플레이션의 목표 변수로 사용하고 있음

○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성장은 2022년과 2023년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필수 재화 및 서비스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2년 하반기 가계 소비 증가율 또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주택시장과 높아진 건설 비용 및 이자율로 향후 주택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수출은 2022년 상반기에 서비스 수출 증가로 강하게 성장했으나, 유럽의 낮은 수요가 2023년 수출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

○ 수입은 수출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 소비 부진으로 2023년에는 수입이 감소하여 순수출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지표 전망치

(단위: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GDP성장률	2.6	-0.4	2.0	3.2
고용(15-74세)	3.0	0.2	0.7	0.8
실업률, 15-74세 노동력 비율	7.4	7.7	7.5	7.2
일반정부 순 융자(% GDP)	0.6	0.2	0.4	1.4
일반 정부 총부채(% GDP)	31.8	29.4	28.6	26.2
정책금리	0.75	2.68	2.72	2.50
소비자물가지수(CPIF)	7.9	5.2	2.0	2.0

주: 2022년 10월 20일까지 발표된 통계 기준
자료: 스웨덴 재무부, Budgetpropositionen för 2023, 2022.11.3

나. 재정전망

□ (2022년 현황) 2022년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2.6%로 양호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세입) 총 세수는 전년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1~2020년 평균인 3.4%보다 높은 수치

○ (세출) 지출한도는 주로 팬데믹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조치로 인해 실제 지출은 당초 통과된 지출한도보다 483억크로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수입) 스웨덴 정부는 2023년 총수입 예산안을 2,790억크로나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 2023년 조세수입은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2년보다 낮지만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준

-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수 감소로 인해 2023년의 조세수입 증가세는 2022년보다 약간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23년 GDP 대비 세입 비율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인 4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22~2025년 동안 총 세수는 2022년 봄 중기재정계획(spring fiscal policy bill)의 추정치보다 연간 280억~950억크로나 상향 조정

<표 2> 2023년 스웨덴 예산안 - 총수입

(단위: 십억크로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조세수입	1,235	1,300	1,313	1,369	1,449
정부사업수입	43	72	43	36	39
자산매각수입	0	5	5	5	5
융자회수	1	1	1	1	1
귀속소득	18	18	19	23	25
EU 보조금	15	16	32	25	16
조세시스템 관련 상계	-121	-127	-133	-139	-143
세입계정에 대변항목으로 분류된 지출	0	0	0	0	0
총수입	1,191	1,285	1,279	1,320	1,391

출처: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Central government budget in figures”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finance/central-government-budget/central-government-budget-in-figures/, 검색일자: 2022.12.6.)

□ (재정지출) 2023년 지출한도, 국가채무 이자비용, 순융자, 현금조정분을 합한 총 지출 규모는 1조 1,954억크로나로 편성

○ 이는 2022년에 비해 155억크로나 증가한 금액으로 거시경제 발전, 특히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2023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2023년 지출한도 수준은 GDP의 25.8%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과 거의 동일하지만 2020~2022년에 비해서는 감소함

○ 노령연금 제도에 대한 지출은 2023년 3,599억크로나로, 2022년에 비해 117억크로나 증가

□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840억크로나, 총 부채는 기준치인 GDP 대비 35% 이하로 떨어지면서 공공 재정이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됨

<표 3> 2023년 스웨덴 예산안(2023 budget bill) - 재정수지

(단위: 십억크로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수입	1,191	1,285	1,279	1,320	1,391
지출한도 (국가채무 이자비용 제외)	1,216	1,231	1,234	1,277	1,281
국가채무 이자비용	-1	23	13	10	9
순융자	-97	-119	-52	7	9
현금조정	-4	0	0	0	0
중앙정부 재정수지	78	151	84	26	92

출처: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Central government budget in figures”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finance/central-government-budget/central-government-budget-in-figures/, 검색일자: 2022.12.6.)

2. 예산기조

□ 2023년 스웨덴 예산안은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고, 가계와 기업 지원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운송비용과 관련한 세금 및 기타 규제를 개혁할 계획

○ 공급 충격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스웨덴의 경우 원자력 발전 감소와 스웨덴 북부와 남부 간 송전 용량 차이 등 국내 문제도 에너지 가격의 상승 원인으로 작용

○ 스웨덴 정부는 전력 가격이 낮은 스웨덴 북부를 제외한 남부와 중부의 가정에 전기 요금에 근거한 전력보조금 지급을 연장할 예정

- 스웨덴 남부가 유럽가격 수준에 더 민감[2]해졌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 수준과 같은 세금 및 기타 국내 규제로 인해 다른 EU 국가에 비해 스웨덴의 전송비용이 상승

○ 재원은 병목 수입(flaskhalsintäkter)[3]에서 확보할 예정이며 전력보조금 외에도 지속가능한 녹색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강화할 예정

- 최근 전기료 급등으로 피해 본 가계와 기업 대상 보조금 확대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를 위한 지원을 강화
-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및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충전소 구축

□ 가계·기업·복지 지원

○ 높은 물가로 인해 무엇보다 돌봄, 학교 및 사회복지 분야의 지자체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와 지역(regions)에 보조금 증액 편성

□ 국방 및 치안 강화

---

2) 스웨덴은 전력의 대부분을 수소와 원자력, 풍력, 수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남부의 경우 수력발전에 적합하지 않아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였으나,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및 인구의 대부분이 밀집된 스웨덴 인구 구조의 특성상 북부 수력 발전소와 남부 수요 센터 사이에 거리가 멀어 송전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스웨덴 남부 지역은 해저 전원 케이블을 통해 유럽 전기 시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 치솟은 유럽 전기 요금이 스웨덴 남부로 급속히 확산되어 남부와 북부 전기 요금은 2배 가까이 벌어짐

3) 송전망 전송 용량 부족으로 국내 전력에 가격 차이가 생겼을 경우에 전력 사업자에 나오는 수입

○ NATO의 회원국이 되어 국방비 지출 의무(GDP의 2%) 이행

○ 우크라이나에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우수한 무기 시스템 등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

□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여건 강화

○ 높은 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고용과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우선주의(Arbetslinjen)[4]를 재정립

- 근로 인센티브를 높이고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자와 중간 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성인 교육 강화

- 65세 이상 고용세액공제 확대

○ 광대역망 구축, 도로정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강화

○ 태양 전지 설치 등 녹색 기술 설치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

3. 예산안 주요내용

□ 2023년 예산안은 의회법(Riksdagsordning) 제9장 제5조 추가 조항에 따라 2022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됨[5][6]

○ 내년도 재정정책 목표를 흑자 달성에 집중하기로 하고, 높은 물가상승률을 낮추면서 동시에 경기침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산 편성

- 2023년 중앙정부 총 세출예산안은 1조 1,950억크로나, 총 세입예산안은 1조 2,790억크로나로 편성, 840억크로나의 재정 흑자를 예상

---

4) 실업자에게 수당 형태의 지원 대신 가능한 한 일자리를 제공을 우선하는 스웨덴의 사회 정치 원칙

5)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가 끝나고 3주 후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고, 예산안 제출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새 정부가 내각에 취임한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늦어도 11월 15일 이전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야하고, 9월 20일 전에는 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음(의회법 추가조항 제9.5.1)

6) 스웨덴 의회법, “Riksdagsordning (2014:801),”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riksdagsordning-2014801_sfs-2014-801#K9, 검색일자: 2022.12.6.

○ 2023년에는 팬데믹 관련 임시 조치가 만료되고 2023년 예산안에 제안 및 발표된 개혁안에 의해 2022~2025년에는 여러 분야의 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가. 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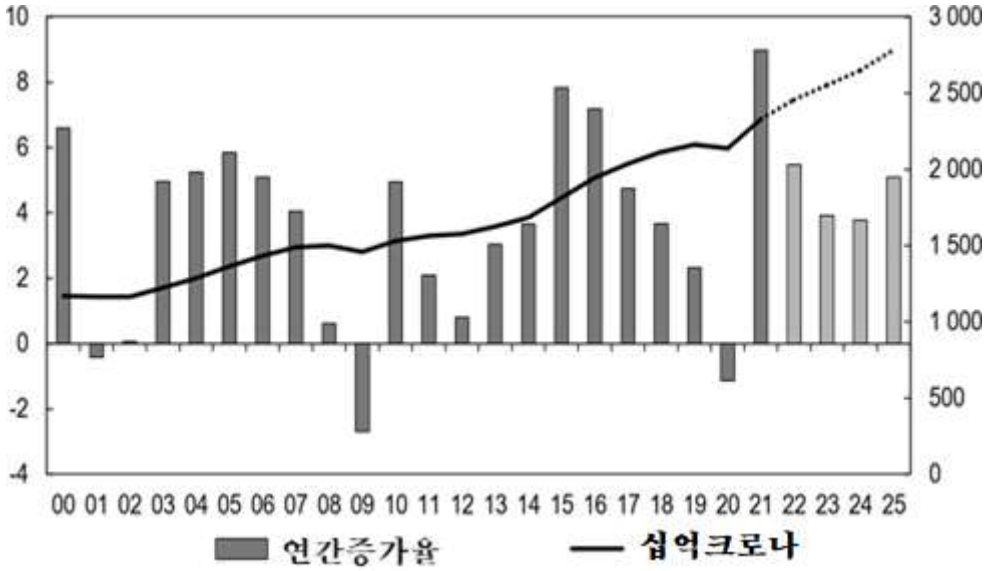
□ 2023년 세입은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2년보다 현저히 낮지만 경상성장률과 비슷한 수준

○ 2023년 조세수입은 2022년과 비교해 126억크로나 증가한 1조 3,127억크로나로 전망

- 2023년에는 청년사회보장부담금 인하, 근로소득에 대한 일시적 세금 감면 등 한시적 지원이 종료됨에도 불과하고 조세수입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가 주요 원인임

- GDP 대비 조세수입은 2023년 41.4%로 2022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상

[그림 1] 총세입 증가율 및 규모



주: 2001~2021 결산, 2022~2025 추정치
원자료: 스웨덴 국세청, 스웨덴 금융감독청 및 자체계산
출처: Budgetpropositionen för 2023, hela dokumentet, prop.2022/23:1, p66, Diagram 5.1 Totala skatteintäkter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직·간접 세수[7]는 2023년 총 세입의 약 60%, GDP의 약 24%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지방 소득세) GDP 대비 지방소득세는 2020년 15.2%에서 2023년 14.3%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이는 가장 중요한 과세기반인 임금총액이 2020년 역성장 한 후 2021년과 2022년에는 모두 경상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될 것에 기인
- (주 소득세) 주 소득세 수입은 2022년에서 2025년 동안 GDP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회보장세) 2023년 사회보장세 수입은 약 5.9% 증가한 7,120억크로나(GDP의 11.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9~23세 고용주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

○ (법인세) 법인세 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해 약세를 보이겠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임

- 2020년의 감소는 팬데믹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매출 지원, 행사 지원 및 세금 납부 유예와 같은 기업 종합대책 때문이며, 2023년은 경기침체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

○ (재산세) 재산세 및 재산 수수료 수입은 2022년과 2023년에 연간 380억크로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소폭 증가하여 2025년에는 400억크로나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예상

○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2021년 총 세수의 28%를 차지하는 소비 및 중간재에 대한 세금 수입은 예측 기간 동안 GDP의 약 12%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수입은 2022년에 1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부가가치세의 가장 중요한 과세기반인 가계 소비의 가격 상승률이 평년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소비세) 소비세 수입은 2022년에 약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

7)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직접세와 사회보장세로 나뉘며, 근로에 대한 직접세는 주로 지방세와 주 소득세로 구성되며 사회보장세는 주로 고용주 부담금과 개인 부담금으로 구성됨

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에너지세가 일시적으로 인하된 결과

· 2023년에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한시적 세금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소비세가 약 3% 증가하고, 2024년에는 약 7%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타) 주로 징수 손실, 가계 및 기업 세부담의 경정 및 이연, 공공 서비스 수수료 및 기금으로 이전된 소득으로 구성된 기타 세금의 2023년 세입은 8.9%증가한 134억크로나로 추정

□ 조세수입을 제외한 기타 수입은 2022년 봄 중기재정계획 대비 110억크로나 상향 조정됨

<표 4> GDP 대비 세입 비중

GDP 대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세입	42.4	42.7	41.4	41.4	41.5	41.5
근로소득세	24.8	24.4	23.4	23.5	23.4	23.5
자본소득세	5.4	6.4	5.7	5.6	5.7	5.6
소비세	12.1	12.1	12	12.1	12.2	12.1
기타	0.1	-0.1	0.2	0.2	0.2	0.2

주: 2001~2021 결산, 2022~2025 추정치
원자료: 스웨덴 통계청, 스웨덴 금융감독청 및 자체계산
출처: Budgetpropositionen för 2023, hela dokumentet, prop.2022/23:1, p69, Tabell 5.2

나. 세출

□ 2023년 27개 영역에 대한 지출 예산[8]은 2022년보다 490억크로나 증가한 1조 2,519억크로나로 편성

○ 2023년 예산안에 제안된 개혁으로 인해 250억크로나, 거시 경제 발전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160억크로나, 거래량 변화로 인해 80억크로나 증액 편성

□ 주요 지출 영역별 증감 내용

8) 국가의 예산은 27개 지출 영역으로 나뉨. 지출한도는 각 지출 영역에 포함된 보조금에 할당된 자금의 합계로 구성되며 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자금으로 구성, 세출 잔액 감소 항목은 할당된 자금과 실제 사용된 자금 간의 차액, 상한선 비용, 즉 지출 상한선에 포함되는 비용은 지출 영역 26 국채 이자을 제외한 지출 영역 1~25 및 27 내의 비용과 노령 연금 시스템의 비용으로 구성

○ (사법) 사법 분야의 지출은 형법 개혁과 사법 체계의 강화로 인해 스웨덴의 법원, 검찰, 보안 경찰, 교도소 등에 대한 자금이 증가하여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국제협력)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장비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1% 원조 목표를 철회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에서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

○ (보건·의료·복지서비스) 팬데믹으로 인한 의약품 급여 비용, 코로나19 백신 등 일시적인 조치의 축소 및 중단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질병 및 장애에 대한 사회보장) 2022년과 2023년 지출 감소는 주로 고액 상병 수당 비용 보상, 병가 공제 보상, 위험군 보상 등 팬데믹으로 인해 도입된 임시 조치가 2022년 3월 말에 종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노인연금) 연금 인상과 연금 수급자를 위한 주택 보조금 강화, 소득연금 보조금 도입에 의해 증가

○ (주택건설 공급 및 소비자정책) 2022년에 증가한 후 2023~2025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2년 증가분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과 임대주택 및 주택 공급을 위한 투자지원에 대해 교부금을 지급하고 잔여 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이 지원되었기 때문

○ (환경 및 자연보호) 기후 보너스[9], 기후 투자, 오염 지역 정화 및 복원, 해양 및 수질 환경 대책, 자연 보호,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지원 투자에 대한 할당 증가로 인해 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2022년에 일시적으로 지급된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금의 일몰로 인해 감소

9) Bonus Malus System. 신차 구매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3년간 높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시스템

○ (산업 및 무역) 개인 및 무역업체에 대한 단기 근무 지원, 이직 지원 등 팬데믹 지원 조치 범위 축소 또는 종료로 인해 2022년과 2023년에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지방정부 보조금지출) 2023년에는 일반 국고보조금이 상시적으로 더욱 강화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5> 2023년 스웨덴 예산안 - 분야별 지출한도

(단위: 십억크로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 거버넌스	16	18	18	18	18
2. 경제 및 금융행정	17	17	19	21	21
3. 국세 및 관세, 세무행정	13	13	13	13	13
4. 사법	57	62	68	72	77
5. 국제협력	2	3	2	2	2
6. 국방 및 국가비상사태 대비	71	81	94	114	123
7. 국제개발협력	47	47	47	50	50
8. 이민정책	8	14	16	14	10
9. 보건·의료·복지서비스	138	123	110	104	101
10. 질병 및 장애에 대한 사회보장	113	114	106	113	114
11. 노인연금	38	46	55	61	62
12. 가족 및 자녀양육	101	102	105	108	111
13. 양성평등 및 신규 이민자 정착지원	6	6	6	5	5
14. 노동시장 및 근로	92	81	90	91	91
15. 장학지원	27	26	28	31	35
16. 교육 및 대학연구	91	92	95	97	97
17. 문화·언론·종교·여가활동	2	20	17	17	17
18. 주택건설 공급 및 소비자정책	5	7	6	6	3
19. 지역개발	3	4	5	4	4
20. 환경 및 자연보호	17	22	20	15	10
21. 에너지	3	13	5	5	5
22. 교통 및 통신	72	77	79	83	90
23. 농림·축산·식품	20	23	19	23	21
24. 산업 및 무역	30	14	11	8	7
25. 지방정부 보조금	153	157	158	162	158
26. 국가채무 이자비용	-1	23	13	10	9
27. EU 분담금	52	47	46	46	47
분야별 지출한도 합	1,215	1,253	1,252	1,293	1,300

출처: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Central government budget in figures”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finance/central-government-budget/central-government-budget-in-figures/, 검색일자: 2022.12.6.)

4. 주요 재정정책

□ 스웨덴 정부는 단기적으로 가정 및 기업 대상 전기요금 지원책을 시행하고, 연료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사무 절차 완화, 사회 복지 개혁을 통한 실업자의 취업 촉진, 고령자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

○ 새 정부는 임기 동안 1,200억크로나에 달하는 재량 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3년 예산안의 개정 조치에 의하면 개정에 따른 2023년 한해 총 비용은 400억크로나로 GDP의 약 0.6%에 해당할 것으로 계산됨

○ 유류세 인하와 마일리지 보상 확대는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의 일시적 인상과 함께 전체 예산의 약 40%를 차지함

<표 6> 2023년 예산안 개정사항

십억크로나

	2023	2024	2025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더 강한 경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한시적 감면	6.73	6.86	6.86
주택수당 추가지원 확대	0.52		
6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0.77	0.77	0.77
성인 직업 교육(yrkesvux) 강화 및 직장 경험 알선 확대	0.45		
현재수준의 실업보험 유지	5.82	6.35	6.64
더 높은 통근 공제(A higher commuting deduction)	1.81	1.81	1.81
ESS[10] 완공을 위한 자금 증액	0.36	0.57	0.53
R&D 공제액 증가	0.1	0.2	0.2
보안 및 공정성 강화			
스웨덴 경찰을 위한 자금 지원 증가	0.9	1.21	1.17
사법시스템 강화	0.31	0.46	0.66
스웨덴 보안 서비스에 대한 기금 증액	0.16	0.3	0.36
예방 이니셔티브	0.91	1.02	0.59
범죄 수익 환수 가능성 개선	0.06	0.12	0.12
범죄 감시 및 예방적 강제조치 확대		0.27	0.27
스웨덴 교도소 수용 인원 증원 및 보호관찰 서비스			1.16
가석방 규정 강화			1.2
신뢰할 수 있는 복지제도			
교과서 개정	0.69	0.56	0.56
특수 교사 특수 교육 및 특수학급에 대한 접근성 향상	0.6	0.9	1
행동관리 학교	0.05	0.1	0.1

사회서비스팀	0.08	0.25	0.25
진료소 확대 및 보건관리 강화	2	0.5	2
산부인과 진료	0.2	1.5	1.5
치료 연기로 인한 질병수당 면제 기간 연장	0.21		
노인 건강 및 외로움 퇴치 지원	0.3	0.3	0.3
어린이를 위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활동 카드(Fritidskort)	0.05	0.73	0.79
지자체 및 지역 보조금 증가	6.00	6.00	6.00
강력한 국방 및 외교정책			
국방 강화	4.26	8.77	9.09
스웨덴 해안 경비대 강화	0.03	0.27	0.25
민방위	0.91	1.28	1.39
비용 효율적 지원 정책	-7.29	-9.51	-12.72
새 에너지 및 기후 정책			
신규 원자력 발전소 준비	0.08	0.15	0.15
폐기물 소각세 폐지	0.41	0.45	0.47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내 열병합 발전소 및 난방플랜트 탄소세 폐지	0.1	0.1	0.1
태양열전지에 대한 보조금 비율 인상	0.28	0.28	0.28
단독주택 에너지 효율성 지원	0.38	0.4	0.4
데이터센터 세금 감면 폐지	-0.14	-0.28	-0.28
국제기후 투자	0.06	0.1	0.1
산업 도약을 위한 투자	0.6	0.6	0.6
충전 인프라 및 직장 충전소 확장	0.54	1.61	1.12
기후 보너스 폐지	2.99	-2.97	-2.97
수생환경개선	0.25	0.25	0.25
습지복원	0.2	0.2	0.2
오염복구	0.34	0.34	0.34
스웨덴 전역 전국 생활권			
광대역 확장	0.6	0.6	0.6
도로유지보수 증가	1		
농업, 임업, 양식업에 대한 한시적 세금 인하	0.38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	0.3	0.3	0.3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투자	1		
지속가능한 이민 및 통합 정책			
난민 감소	-0.39	-0.94	-1.28
스웨덴 이민청 및 이민 법원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0.57	0.35	0.14
정부 지출 관리 개선			
새 인구조사를 통한 인구 등록 개선	0.08	0.17	0.17
기타	3.82	6.58	4.5
일반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40.43**	**39.88**	**38.03**

출처: from the budget bill for 2023 budget statement, p5, Table 1.1 Table of reforms

10) European Spallation Source, 스웨덴 룬드에 건설·가동 중인 펄스 중성자를 기반으로 한 다학문 연구시설

가. 에너지 및 기후 정책

□ 에너지 분야에서는 2040년까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에서 탄소배출 제로 100%로 변경하고, 원자력 발전의 개발 및 확대를 추진

○ 에너지 위기 대응

- 최근 전기요금 급등으로 피해 본 가계와 기업 대상 보조금 확대
- 휘발유, 경유에 대한 일시적 에너지세 감면, 농업용 경유에 대한 한시적 세금 감면 연장

○ 에너지 및 기후

-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및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충전소 구축
- 태양전지 투자 확대
- 대규모 바이오 탄소 포집 저장, 탄소 배출량 감소 및 환경 악화 방지를 위한 습지 복원
- 해양환경 개선 기금 마련
- 이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장소 이외의 원자로 건설 금지 및 운전 중인 원자로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삭제

나. 국방 및 치안 강화

□ NATO에 가입해 국방력을 강화하며, 2023년부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됨에 따라 EU 전체의 안보 강화, 우크라이나 공동 지원 및 EU의 경쟁력 강화

○ 국방 강화

- NATO 가입 추진에 따라 군사 방어력 강화 및 2026년까지 NATO가 설정한 국방비 지출목표(GDP의 2%)를 따르기 위해 국방비 증액

○ 치안 강화

- EU 평균에 상응하는 경찰 인력 규모 확충 및 수감, 보호감찰 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 경찰청 증원 및 스웨덴 보안당국 예산 증액

- 범죄 예방 목적의 부모 지원 프로그램 및 여성 보호 기관 지원 확대
- 소외계층 자녀의 안전한 야외 활동 공간 확대
- 관련 형법 개정 및 사법 시스템 강화

다. 가계·기업·복지제도 지원 방안

□ 높은 물가로 인해 특히 보건,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자체 지원이 축소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늘릴 예정

○ 의료·복지 강화

- 진료 대기시간 단축, 요양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산부인과 등 여성·노인 건강 진료 지원 범위 확대
- 아동 신체활동 강화 목적의 레저 카드 제도(Fritidskort) 도입[11)]

○ 저소득층 지원

- 2023년 6월 30일까지 팬데믹 기간 중 도입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주택수당 지급을 연장 하고 팬데믹 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실업 보험 혜택 유지

○ 고용 안정 지원

-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학자금 지원제도(omställningsstudiestödet)[12)] 등 지자체 보조금 증액
- 65세 이상 고령자 근로소득세 공제 강화

○ 교육 인프라 개선

- 전문 교사 인원 확충, 방과 후 수업 강화, 현대적 방식의 교재 도입 등

---

11) 6~18세의 모든 어린이에게 여가 활동 비용을 지불하는 카드로 30일 또는 90일 동안 오후, 공휴일, 주말에 사용 가능. 1인당 최대 1,000크로나 지급

12) 27세에서 62세 사이의 장기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혹은 완전히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환 학습 지원